

# 2024 KCUE 대학 총장 설문( 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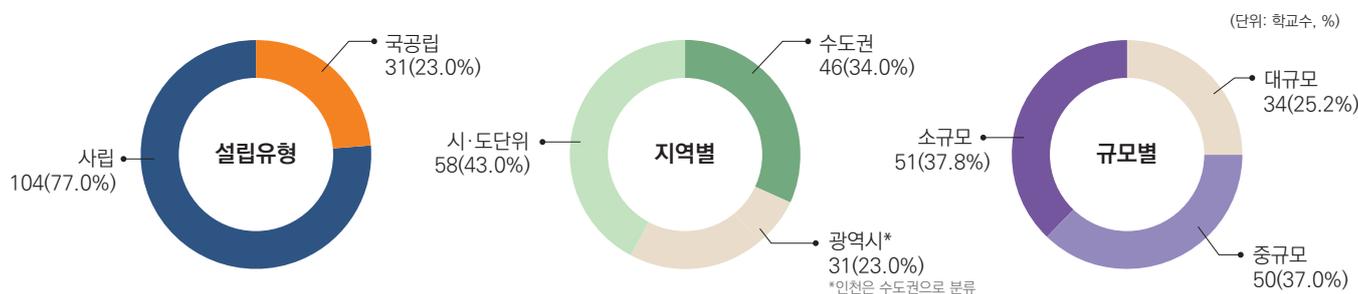
2024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 I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 장제국  
담 당 | 대학혁신지원실 기획혁신팀  
이성은 팀장, 김흔 연구원  
문 의 | 02-6919-3816  
발행일 | 2024.01.31.

##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0일(수) ~ 1월 22일(월)
- **조사방법** :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 회원대학 190개교\* ➔ 135개교응답(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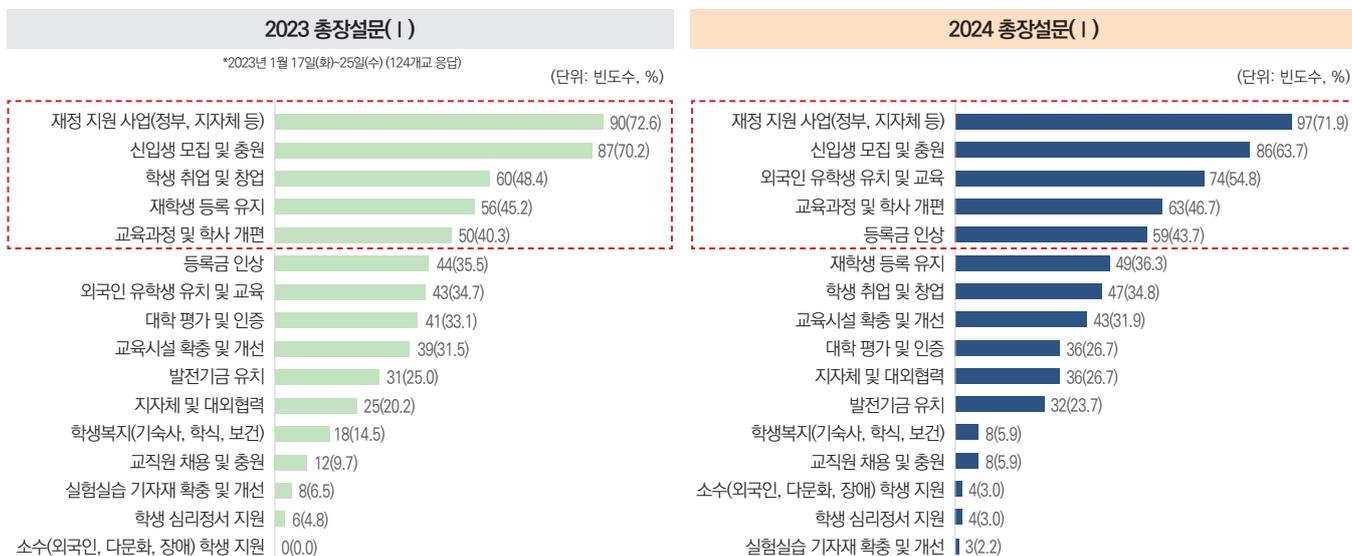
\* 문항특성상 특별대 7교 제외(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전통문화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그림 1] 응답대학 특성

## II.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

- (전체)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1.9%(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63.7%(86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54.8%(74명),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6.7%(63명), '등록금 인상' 43.7%(59명) 순으로 나타남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1, 2위로 변동 없으며, 학령인구감소 대응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상승(전년 대비 20.1%p ↑)함
  - 그 외 정부정책과 관련 있는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과 '지자체 및 대외협력' 영역이 약 6.5%p 내외로 상승하여 9위로 순위가 올라감



[그림 2]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2023 총장설문 I 비교)

-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른 관심 영역은,
  -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총원'이 1위로 나타난 반면, 국공립과 대규모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수도권 대학은 순위에 들지 않음
  - 국공립과 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및 학사개편'이 2위로 높게 나타남

〈표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상위 5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	1	1	1	1	2	1	1	1	1
신입생 모집 및 총원	2	4	2		1	1	4	2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3	4	3	4	3	2	2	3	3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	2	5	2	4		4	4	5
등록금 인상	5		4	3		5	3	4	4
재학생 등록 유지					4	4			
학생 취업 및 창업		4			5	3	5	5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3							
지자체 및 대외협력		5			4				
발전기금 유치				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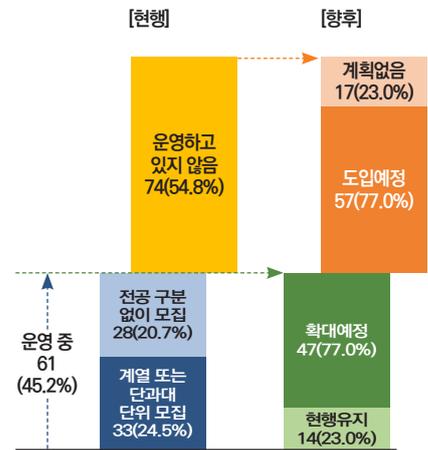
### III. 자유전공(또는 무전공) 학생선발 전형 운영 관련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2024.1.24.)'에서, 「전공자유선택제(무전공)」를 도입 및 확대 대학에 대한 재정사업 연계·지원 추진을 발표함

- 응답한 135개 대학 중 현재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무전공)'하는 대학은 28개교(20.7%),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자유전공)'하는 대학은 33개교(24.5%)이며,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74개교(54.8%)로 나타남
  - 또한, 향후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61개교 중 47개교(77%)는 '확대 예정'이며, 현재 운영하지 않는 74개교 중 57개교(77%)는 '도입 예정'으로 응답함

〈표 2〉 자유전공(또는 무전공)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재 현황(n=135개교)			향후 계획				
구분	빈도수	비율	구분	빈도수	비율	합계	
①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	28	(20.7)	자유전공 및 무전공 운영 (①+②)	현행 유지	14	(23.0)	61 (100%)
②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	33	(24.5)		확대 예정	47	(77.0)	
③ 운영하고 있지 않음	74	(54.8)	운영하고 있지 않음(③)	계획 없음	17	(23.0)	74 (100%)
			도입 예정	57	(77.0)		



〈그림 3〉 자유전공(또는 무전공)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대학현장에서 '모집단위 자유전공·무전공' 도입 및 확대 정책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총 10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자유전공·무전공 도입·확대 정책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학문편중, 전공쏠림 현상',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 소규모 융합 학부의 형태를 자유전공·무전공의 유형으로 인정 필요, ▲ 오랜 기간 자유전공·무전공 운영 경험 시 높은 학생 만족도 등 긍정적 효과 등이 있음

〈표 3〉 자유전공·무전공 도입 및 확대 정책 적용 어려움

(단위: 빈도수)

NO.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1	학문 편중, 전공 쏠림 현상	44	10	34	14	12	18	15	22	7
2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30	6	24	19	5	6	13	13	4
3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	28	10	18	14	7	7	3	5	20
4	신입생 유자모집 및 정원 확보 문제	23	1	22	3	6	14	3	12	8
5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학사구조조정 및 개선 포함)	21	1	20	8	2	11	5	9	7
6	교원(채용, 수급, 관리, 수업 시수 등) 관련 어려움	17	3	14	5	6	6	5	9	3
7	교육 인프라(강의실, 실험실습 등) 운영 관련 어려움	17	3	14	6	4	7	8	7	2
8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전공 교육 질 저하 우려	15	1	14	9	3	3	8	5	2
9	학생 관리(중도이탈, 학습진로 코칭 등) 및 관련 추가 전문 인력 필요	12	3	9	2	3	7	2	9	1
10	정책 의견 수렴 및 정책 시행 절차에서 촉박한 준비 기간	11	4	7	4	5	2	3	8	0

○ '모집단위 자유전공·무전공' 도입·확대 정책의 개선 사항은 총 10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모집단위 자유전공·무전공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라 도입·운영의 자율성과 개선책 마련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도입', '자유전공·무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안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의 필요성, 중요성, 당위성 확보 필요 등이 있음

〈표 4〉 '모집단위 자유전공·무전공' 도입·확대 정책 개선

(단위: 빈도수)

NO.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1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라 도입·운영의 자율성과 개선책 마련 필요	50	11	39	19	11	20	11	17	22
2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도입(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후, 시행시점 조정 필요)	26	9	17	10	5	11	8	14	4
3	자유전공·무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25	3	22	10	2	13	9	10	6
4	자유전공·무전공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22	3	19	10	5	7	8	10	4
5	기초·보호 학문 육성 정책 필요	16	8	8	5	6	5	5	6	5
6	강사, 행정인력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현행 강사법 관련 등)	11	2	9	4	3	4	2	7	2
7	행정 관련 인프라 지원 및 평가 지표 등 통계 기준 조정 필요	10	2	8	5	3	2	4	4	2
8	교육내실화를 위한 학생 지원 제도 마련	10	2	8	4	3	3	1	4	5
9	지역간 편차 보완 정책	9	2	7	0	1	8	3	4	2
10	정부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폐지	8	2	6	0	4	4	2	4	2

IV.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우려 및 개선 사항 관련

○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우려 및 개선 사항은, 총 11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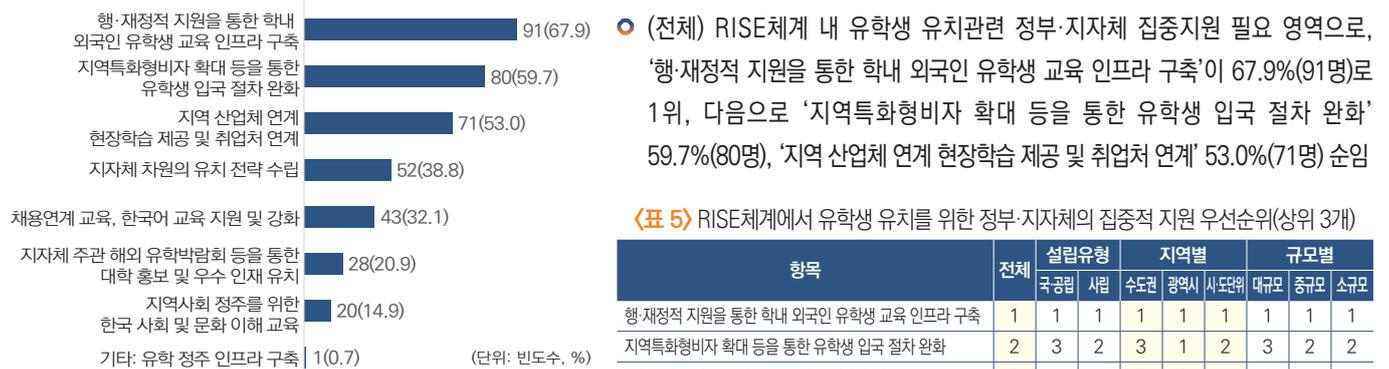
- '지역대학간 경쟁·갈등 및 일부 특정대학 편중'이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 지적되었으며, '지자체와 RISE 전담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필요'가 개선 사항으로 제안됨
- 기타 의견으로 ▲ 자치단체장 임기와 관계없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예측가능성(정책일관성) 필요, ▲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정주여건의 수도권 집중으로, 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설계 필요, ▲ RISE센터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필요 등이 있음



〈그림 4〉 RISE체계 관련 우려 및 개선 사항

V. 유학생 유치 및 대학 국제화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관련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교육부, 2023.9.)'에서, RISE체계 내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학업·진로설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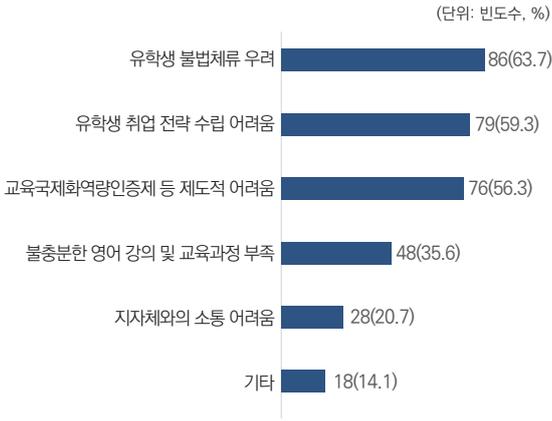


- (전체) RISE체계 내 유학생 유치관련 정부·지자체 집중지원 필요 영역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내 외국인 유학생 교육 인프라 구축'이 67.9%(91명)로 1위, 다음으로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등을 통한 유학생 입국 절차 완화' 59.7%(80명), '지역 산업체 연계 현장학습 제공 및 취업처 연계' 53.0%(71명) 순임

〈표 5〉 RISE체계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중적 지원 우선순위(상위 3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내 외국인 유학생 교육 인프라 구축	1	1	1	1	1	1	1	1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등을 통한 유학생 입국 절차 완화	2	3	2	3	1	2	3	2	
지역 산업체 연계 현장학습 제공 및 취업처 연계	3	2	3	2	2	2	2	3	
지자체 차원의 유치 전략 수립					3	3		3	

〈그림 5〉 RISE체계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지자체 집중지원 우선순위



[그림 6] 대학에서의 유학생 유지 관련 어려움

○ (전체) 대학 현장에서 유학생 유지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 우려'가 63.7%(86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학생 취업 전략 수립 어려움' 59.3%(79명),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제도적 어려움' 56.3%(76명) 순으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의 경우, '불충분한 영어 강의 및 교육과정 부족'이 1위로 나타남

<표 6> 대학에서의 유학생 유지 관련 어려움 우선순위(상위 3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유학생 불법체류 우려	1	3	1	2	1	1	2	2	1
유학생 취업 전략 수립 어려움	2	2	3	1	3	3	1	1	3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제도적 어려움	3		2	3	2	2	3	3	2
불충분한 영어 강의 및 교육과정 부족		1							

○ 대학 국제화 및 유학생 유지 관련 정부·지자체·대교협 지원요청으로는, 총 12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대학 국제화 및 유학생 유지관련 지원에 대해 '유학 비자 제도 개선', '지자체 연계 취업 지원'이 1, 2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제도 개선',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 '유학생 가족 포함 정주 지원'이 주요 요청 사항으로 제안됨
- 기타 의견으로 ▲ 유학생 선발·운영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 유학생 관련 대학평가 지표 개선,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대학 간 과열 경쟁 방지 등이 있음

<표 7> 대학 국제화 및 유학생 유지 관련 정부·지자체·대교협 지원요청 사항

(단위: 빈도수)

NO.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1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46	10	36	12	11	23	8	20	18
2	지자체 연계 취업 지원	28	6	22	8	7	13	6	13	9
3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등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제도 개선	23	4	19	6	6	11	8	12	3
4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	23	2	21	10	5	8	4	11	8
5	유학생 정주 지원(가족 포함)	23	6	17	5	6	12	7	9	7
6	유학생 유지(홍보, 모집 방식 개선 등) 지원	20	5	15	6	1	13	5	7	8
7	부처간 협력 체계 및 유학생 정책 정비	20	6	14	9	6	5	7	7	6
8	대학 및 유학생 재정적 지원	19	9	10	7	4	8	4	7	8
9	언어, 문화 등 외국인 유학생 적응 교육 지원	12	2	10	4	3	5	2	4	6
10	대학(간)-지자체(간) 협력 강화	10	5	5	2	1	7	3	5	2
11	유학생 유지 및 관리 제도 유연화	9	2	7	6	2	1	4	2	3
12	대교협 차원 지원(정부 및 지자체 협의, 유학생 관련 연구 등) 강화	8	1	7	3	0	5	1	5	2

Remark

대학의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대학-지자체-정부 간 긴밀한 협력 및 지원 강화 필요

1.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오랜기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1위, 2위로 초점이 맞춰졌으며, 학생 충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자유전공·무전공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학문 편중 및 전공 쓸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관련하여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학 사회의 우려 및 개선 사항으로, 지역대학 간 경쟁·갈등 및 일부 특정 대학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부각되었고, 2023년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Ⅰ, Ⅱ)에서와 같이 지자체와 RISE 전담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및 상호 소통 채널 구축 필요가 제안됨
4. RISE체계에서 지자체 및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교육-관리-취업-정주'를 지원함에 있어, 불법체류 방지 및 지자체 연계 취업 지원(안정적 정주 지원)을 위해 비자 제도 및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제안됨